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공급망) 전미대외무역협회, 관세가 미국 기업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 미국 내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관세 정책이 기업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제통상 동향

- (반도체) 트럼프,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언급...미국 내 투자 기업은 면제 방침 4
- (관세) 美, 러시아산 원유 수입 지속 이유로 對인도 추가 관세 부과 결정 5
- (관세) 美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소송 심리 여부 9.29일 회의에서 결정 예정 6

⚖️ 의회법안 동향

- 수입 관세 부과 면제 법안 등 1건 6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7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8

📅 워싱턴 D.C. 주요일정

8.12(화)	• 7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Core CPI), 7월 연방 예산(Monthly U.S. federal budget)
8.13(수)	• 애틀란타 연준 총재 보스틱 연설(Atlanta Fed President Bostic speaks)
8.14(목)	• 8월 2주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Initial jobless claims)

(공급망) 전미대외무역협회, 관세가 미국 기업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개 요

- 미국 전미대외무역협회*(NFTC),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권고안 제언(8.4)

*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미국 기업의 글로벌 무역 및 통상 정책을 대변하고 자문 제공, 산하 조직 및 협의체 운영으로 프로젝트와 연구를 진행하는 민간 무역 협의기구

- 설문조사* 결과 관세의 영향으로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정책의 명확성과 조정이 시급함을 강조

* 2025 Supply Chain Survey: 미국 내 산업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2. 주요 내용

- 설문조사를 통해 관세 정책이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모든 산업 부문 공급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원자재 조달(94%), 제조·생산능력(90%), 애프터마켓 관련 서비스(76%)로 응답

- NFTC는 핵심 광물, 반도체 등 핵심 부품 미국 내 수급이 어렵고 자국 조달 역량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우려되는 결과라고 언급

-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미국 시장 내 자재 부족으로 인한 수급 문제로 제품·서비스 출시를 연기 또는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제품 및 서비스 출시 축소·지연(56%), △미국 내 사업 축소 또는 축소 예정(47%), △공급망 파트너 운영 철수 준비(30%), △관세 정책의 잦은 변경과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에 제약(70%)으로 응답

- 누적된 관세 부담이 혁신과 경쟁력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 첨단 제조 분야에서 기업의 80%는 관세가 연비, 안전, 지속가능성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응답

- NFTC는 규정 준수 및 소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R&D, 인력 개발 및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

□ 관세가 미치는 산업별 영향

•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정보 혁신과 경쟁력 위협

-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저가 제품에 대한 접근성 감소(75%), △반도체 및 통신장비와 같은 주요 인프라 조달 차질(50%), △관세가 디지털 무역 및 수출 준비를 위한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75%)하고 있다고 응답

• 에너지 부문: 인프라 비용 증가 및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 영향

- △관세로 인해 비용 증가 및 필수 장비에 대한 접근 제한(100%), △관세가 미국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동의(100%)
- NFTC는 관세가 인프라 비용 상승 및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해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

• 식품 및 농업 부문: 배송 경로·공급업체 변경, 원자재·기계 수급에 난항

- △식품 안전 표준 유지, 투자 능력 손상(100%), △관세로 배송 경로 및 공급업체 변경(50%), △관세가 원자재, 포장재 및 기계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100%) 지적

• 또한, 60% 이상의 기업이 보복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품목별(232조, 301조 등) 복잡한 관세 체계로 인한 규정 준수 부담 지적

□ 전미대외무역협회, 미 정부에 관세의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한 권고 제안

- ① 무역 파트너별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목표 설정, ②자국 수급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단계적 조치 시행, ③ 관세 효과 재검토 및 조정 시스템 구축, ④ 미국 내 제조업 세제 혜택, 인력 개발 프로그램 및 우호적 투자 정책 확대 등 권고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 전미대외무역협회(8.4, 8.4)



(반도체) 트럼프,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언급·미국 내 투자기업은 면제 방침

• (개요)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언급, 미국 내 투자·생산 기업 대상 관세 면제 계획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1,000억 달러 신규 투자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입 칩 및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
-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에 투자하거나 설비를 구축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를 검토 중

※ 반도체 관세는 무역확장법(Section 232) 기반의 국가안보 조치로 추진, 구체적 적용 시기 및 대상 품목 등은 추후 별도 발표 예정

• (상세)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설비를 갖춘 기업의 관세 면제에 중점

- 공장 건설 중이거나 투자 확약이 있으면 관세가 면제되나, 실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 및 추징 가능성도 경고
- 기존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등 완제품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관세 조치와 연계된 별도 관세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 (반응)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생산 투자에 대한 환영 입장 재확인

- 현지 언론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및 ICT 완제품 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 기대
- 업계에서는 관세 면제 요건(공장 건설 착공 또는 정부와의 공식 투자 약정 등), 검증 가능성, 대상 품목 범위, 시행 일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블룸버그(8.6), 인사이드(8.6)

(관세) 美, 러시아산 원유 수입 지속 이유로 對인도 추가 관세 부과 결정

- (개요) 트럼프 대통령, 對인도 25%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8.6)

-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기존 관세와 합산 시 총 50% 고율 관세 적용 예정
- 동 조치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간접 제재 수단으로, 인도의 지속적인 대러 원유 수입에 대응하여 전략적 통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 (상세) 232조와 별도 시행되는 고율관세 조치 및 의약품 확대 가능성 시사

- 동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무역확장법 제232조와는 별도로 시행되며, 기존 25% 관세에 25%가 추가 부과되어 총 50%의 고율 종가세가 적용되는 구조
-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등 기존 232조 적용 품목과는 중복되지 않으며, 일부 원자재 및 화학제품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세 제외 대상으로 유지
- 트럼프 대통령은 對인도 의약품에 대해서도 232조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제약산업 등 민감 품목으로의 고율관세 확대 가능성 시사

- (반응) 인도,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 조치”로 규정, 필요시 보복 조치 검토 시사

- 인도 외교부는 “형평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적 조치”로 규정, “미국과 EU 역시 전략적 필요에 따라 러시아산 자원을 지속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
-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는 적절한 조치”로 언급하며, 對러 제재 회피 및 에너지 협력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 재확인
-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미·인도 간 전략적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및 에너지 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고 평가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인사이드(8.6), 뉴욕타임스(8.7)

(관세) 美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소송 심리 여부 9.29일 회의에서 결정 예정

- (개요)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관련 소송 심리를 9.29일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

- 원고(Learning Resources, Hand2Mind)는 아직 하급심(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사건이 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先심리 청원(certiorari before judgment)을 제출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 대법원 6.20일 신속 심리 요청은 기각, 본안 청원에 대해서는 9.29일 회의에서 수리 여부 결정

※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사건을 수리하지만, 이번처럼 긴급하거나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있을 경우 하급심 판결 이전에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음.

- (상세) 원고는 자사 사건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이미 진행 중인 선도 사건을 대법원이 병합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CAFC에서는 IEEPA 기반 관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12개 주정부와 수입업체 5곳이 제기한 소송(V.O.S. Selections v. Trump)의 구두변론이 7.31일 종료

- 반면, 원고가 제기한 사건은 D.C. 연방항소법원에서 9.30일에 첫 구두변론 예정으로, 선도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원고는 양 사건이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선도 사건에서 패소한 측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병합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반된 판결이 발생할 우려 존재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Olivia Kim

■ 자료원 | Trade Law Daily ([8.7](#), [8.6](#), [6.23](#))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수입 관세 면제 (8.05)	H.R.4899 (하) (8.05)	Chris Pappas (민)	<'25년 2월 1일 수입 관세 부과 면제 법안> ▪ '25년 2월 1일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로 부과된 관세 중 중소기업 수입 물품을 면제하는 법안

* 미국 동부 시간 8월 7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u>Trump Pledged to Bring Back Manufacturing. The Sector Is Sputtering.</u>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약속에도 침체된 산업 현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 불확실성 증가, 관세 정책 도입 이전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출 증가 및 미국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자동차·철강 산업 및 고용 침체
The Washington Post	<u>Trump threatens 100% tariffs on computer chips for companies that don't build in U.S.</u> (트럼프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100%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제조하고 있지 않거나 투자를 약속하지 않은 반도체 기업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브리핑에 함께한 팀 쿡 Apple CEO는 같은 날 미국 내 조달 및 고용에 신규 1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
The New York Times	<u>Suddenly, the Trump Administration Tightens the Vise on Wind Farms</u> (트럼프 행정부, 풍력 발전 단지에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
	미국 내무부는 바이든 정부 당시 건설 승인을 받은 아이다호 주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법적 결함’으로 인해 승인을 취소하는 등 태양열 및 풍력 발전 규제 강화를 실시
CNN	<u>Big changes could be coming for your 401(k)</u> (미국 연금 저축 제도에 대해 중대한 변화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401(k) 및 기타 퇴직연금 제도에서 근로자들이 일부 자산을 사모펀드 등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
Bloomberg	<u>White House Prepares For Trump To Nominate Miran To Fed</u>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미란 연준 이사 지명 준비)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로 지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며 만약 미란 위원장이 연준 이사로 지명되더라도 내년 1월까지 짧은 임시 임기를 채울 것이라 밝힘

* 미국 동부 시간 8월 7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28	美 정부 『AI 행동계획』 행정명령 발효 -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27	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7월
US25-26	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	2025.07월
US25-25	美 최초 암호화폐 법안(Geniu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7월
US25-24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	2025.07월
US25-23	PIIE,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2025.07월
US25-22	미·중 무역 프레임워크 진행 경과 및 향후 전망	2025.07월
US25-21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현지 반응 및 전망	2025.06월
US25-20	미국 232조 관세 대상 철강 파생 제품 추가 지정에 따른 영향 분석	2025.06월
US25-19	미국 제조업 산업별 관세 정책 영향 및 현지 동향	2025.06월
US25-18	美 에너지 자립 및 원자력 산업 부양을 위한 행정 조치 주요 내용	2025.06월
US25-17	美 하원 세제 법안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 수정 조항	2025.06월
US25-16	트럼프 행정부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한 법원 판결 동향	2025.05월
US25-15	G7 재무장관 회의 주요 논의내용 및 현지 동향	2025.05월
US25-14	약가 인하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5월
US25-13	美 정기선 해운산업의 경제적 영향 및 항만료 추정 비용 분석 주요 내용	2025.05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22 (2025.5.13.)		
코인시-21 (2025.2.8.)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